

# 진보신당 ISSUE BRIEFING 이슈 브리핑

## 물가폭등! 재벌 위한 고회환 정책 탕!



발행일	2011.02.15
작성자	유성재 정책연구위원
발행처	진보신당 정책위원회

## <요 약>

-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은 이상 기후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 및 **세계경제 차원의 구조적 요인과 이명박 정부의 수출대기업 중심의 고환율 정책이 결합**되어 발생한 성격을 가짐
  - 이는 ‘2분기 이후 기상여건이 개선되는 등 불안 요인이 점차 해소되면 35% 안팎으로’ 안정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물가상승이 세계적인 차원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장기화될 것임을 의미
-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물가상승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**이명박 정부의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-저금리 정책이 파산**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기조의 변화 없이는 물가통제는 사실상 어려움
  - 그간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-저금리 정책이 글로벌 위기 이후, 경제성장과 가계부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으나,
  - 사실 고환율-저금리 정책은 이명박 정부 취임과 동시에 추진된 것으로 수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, 물가상승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, 서민의 몫이었음
  - 세계 경제위기 이후, 물가상승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고환율-저금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대비한 경제체질 강화를 사실상 포기 [그림 2 참조]
-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 충격에 대한 사전 예방정책 없이 추진된 고환율-저금리 정책은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**금리, 환율 등 재량적 금융통화정책의 무력화, 즉 정책주권을 상실하는 결과**를 가져왔다는 점임
  - DII 규제완화 등 건설사와 거품부양 정책 등으로 가계부채는 더욱 부실해지고,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 분위기가 고조되자 고환율을 지렛대로 수익을 누려왔던 해외자본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현상으로 나타남
  - 결국 고환율-저금리 정책은 무력화 되었으며, 저환율-고금리 체제로의 이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. 그 이행은 노동자, 서민경제에게 더 큰 부담으로 나타날 것임
-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신당은 노동자와 서민가계가 물가와 금리충격으로부터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

## - 목 차 -

1. 현황.....	1
2.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.....	2
3. 이명박 정부의 외환·금융 정책의 실패와 금융주권 상실.....	4
4. 물가상승기,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.....	5
1) 고환율-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.....	5
2)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.....	5
3) 노동자·서민·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.....	6
4) 가계부채의 구조개선.....	6
5)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.....	7

# 물가폭등! 재벌 위한 고회환 정책 탓!

## 1. 현 황

○ 1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4.1%(전년동월대비)를 기록한 데,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6.2% 수직상승하여 2년 2개월내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

- 지난 12월의 3.5%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월에는 4.1%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, 농산물 가격(24.4%)과 석유류 가격(10.9%)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
- 생산자 물가 역시 농축수산업과 석유제품의 가격상승률이 급격한 것으로 나타남
  - 채소 47.2%, 과일 74.8%, 수산식품 19.0% 석유제품 13.2% 1차금속 17.9%
- 수입물가가 지속적으로 10%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추세
- 서민들의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체감 물가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, 공공요금의 요동,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

[표 1]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변화 추이

( 전년동월 대비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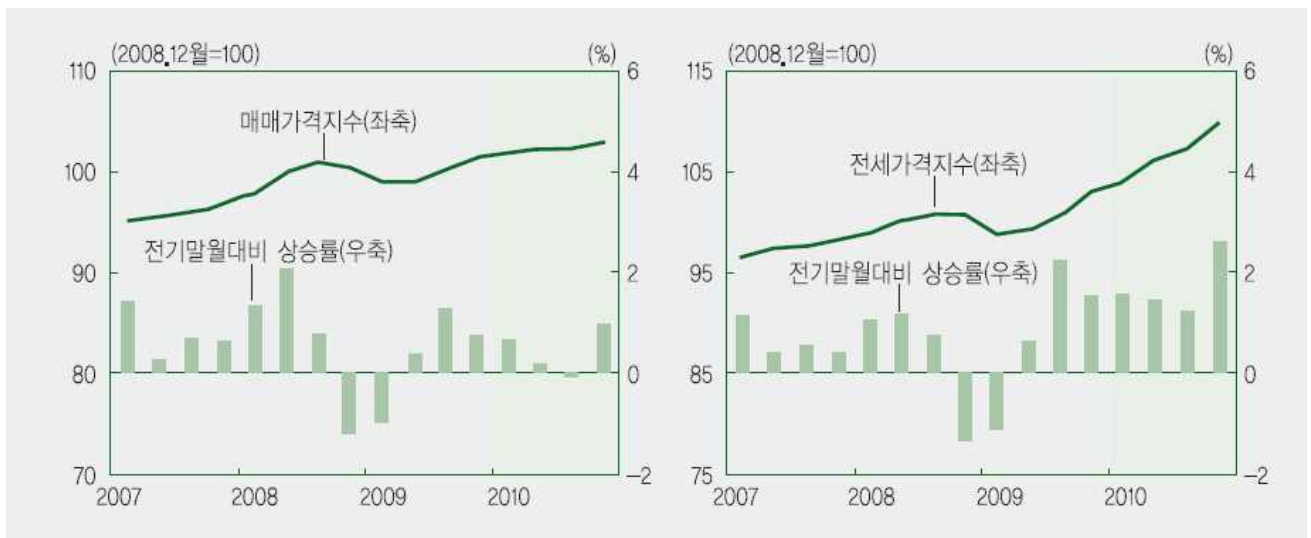
	2010년				2011년
	9월	10월	11월	12월	1월
소비자물가상승률	3.6	4.1	3.3	3.5	4.1
▪ 석유류 가격상승률	3.4	7.3	5.0	8.3	10.9
▪ 농산물 가격상승률	32.7	37.0	28.7	26.5	24.4
생산자물가상승률	4.0	5.0	4.9	5.3	6.2
수입물가상승률(달러 기준)	12.6	13.0	11.9	14.5	14.1

자료 : 한국은행

○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과 중대형 중심으로 공급되는 시장 실패로 인해 전세난과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

- 주택매매는 전기말 대비 1.9% 상승하여 전년(1.5%)과 비슷한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지만,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대한 미분양 물량이 존재
- 주택전세 가격은 전기말 대비 7.1% 상승하여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

[그림 1]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(전국)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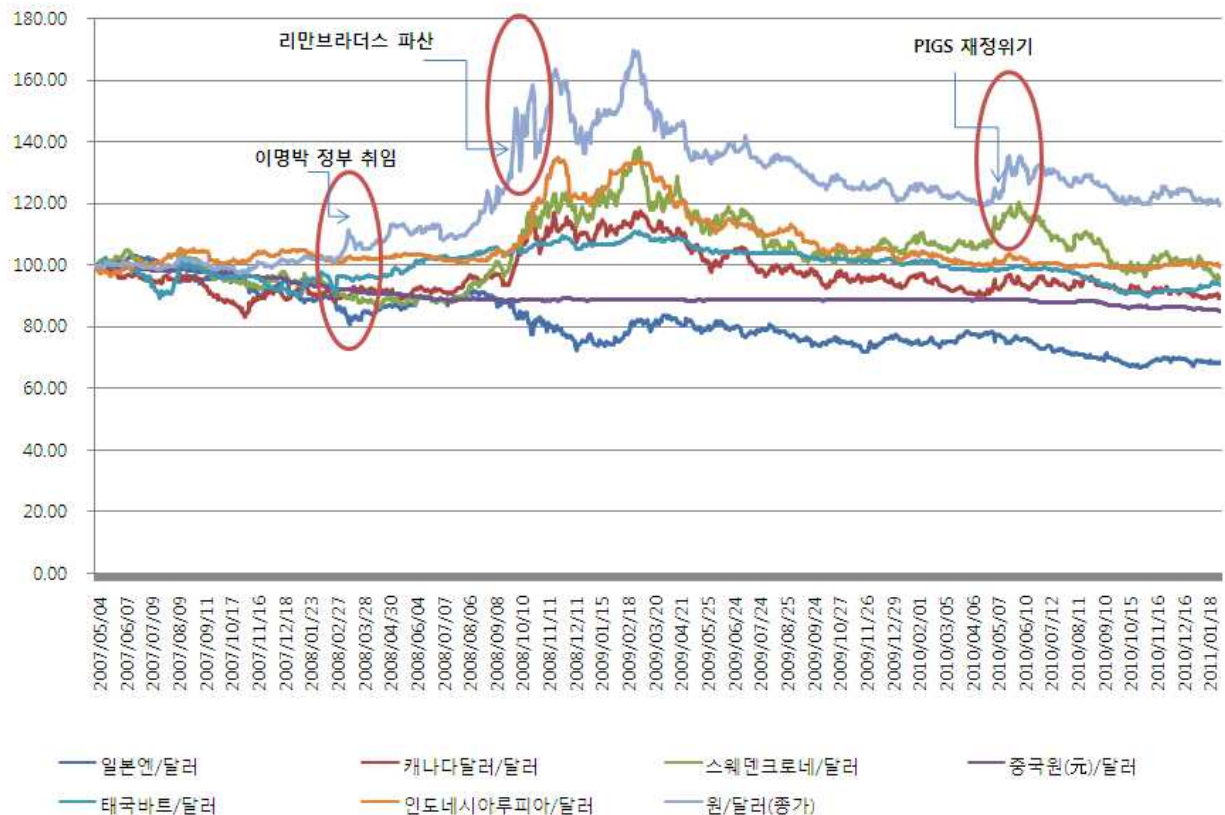
## 2.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

○ 물가상승의 1차적인 원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, 미국의 달러 양적완화(달러 무한공급)과 정부의 확대재정 투입에 따름

- 미국의 양적완화 이후, 달러가치 하락에 따라 석유 등 원자재와 식량가격이 상승하고, 국제 투기자본에 의해 이들 부문 투기가 지속됨에 따라 가격 상승이 가속
- 또한 미국은 통화정책을 통해 천문학적 채무부담을 중국, 일본, 한국, 중동 등 국가로의 전가를 하고 있으며, 환율정책을 통해 무역불균형의 해소를 도모하고 있음

[그림 2] 주요국의 달러 대비 환율 변화 추이

(2005년5월 4일 =100)



자료 : 한국은행

○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부터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였으며,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고환율 정책을 강화하는 등 물가상승에 대해 사실상 통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

- [그림 1의 맨 위 선] 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취임 당시에서부터 추진되었으며, 경제위기 이후 더욱 증폭되었고, 여전히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음
- 2005년 5월을 기준으로 달러 대비 각국 통화가치를 비교해 보았을 시, 경제위기가 진정된 2010년 이후 일본, 캐나다, 태국,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경기위기 이전으로 회복 또는 평가절상되었으나 한국만 여전히 고환율을 유지

○ 최근 물가상승은 이상 기후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 및 세계경제 차원의 구조적 요인과 이명박 정부의 수출대기업 중심의 고환율 정책이 결합되어 발생한 성격을 가짐

### 3. 이명박 정부의 외환·금융 정책의 실패와 금융주권 상실

- 물가와 전세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서민의 구매력 감소와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상승이 ‘
    - 기획재정부는 ‘1분기에는 4%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지지만, 2분기 이후 기상여건이 개선되는 등 불안 요인이 점차 해소되면 3.5% 안팎으로’ 안정될 것으로 안이한 전망
    - 이명박 대통령은 금통위 회의 전날인 10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‘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사는 나라’라며 ‘수출 드라이브’를 통한 고성장 유지 방침을 분명히 밝힘
  - 이명박 정부의 2011년 경제정책 목표인 ‘5% 경제성장’, ‘3% 물가’ 달성을 위한 ‘고환율’, ‘저금리’ 기조는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며, 나아가 **물가 통제를 위한 재량적 정책수단이 무력화되는** 결과를 가져올 것임
    - 정부는 2월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와 물가상승 억제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저 버렸음
    - 최근 미국 재무부는 <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>를 통해 한국이 ‘시장결정환율’을 운영하고 있고 금융위기를 전후해 대규모 시장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환율 개입에 경고를 보내고 있음
    - 만약 이명박 정부가 저환율 체제로 입장을 전환한다 하더라도, 선진국 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더 이상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해외자본의 급격한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
- ※ 최근 2월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긴축재정을 우려하여 2월 3일~9일간 한국 관련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해외자본이 7억5천300만달러 순유출되었으며, 그 결과 주식시장은 100p 이상 하락 (동양종합금융증권)
- 물가상승이 구조화된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한 오기와 성과주의로 물가억제를 위한 정책 실패(失期)는 물론 정책주권조차 잃어버림
    - 취임 이후 이른바 747공약과 수출 중심경제 드라이브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여 스스로 물가불안을 자초하였으며,
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,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‘교육투자’ 또는 ‘재분배 정책’과 같은 경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아닌, ‘4대강 사업’과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무모함을 보임
- 또한 경제의 체질 개선 개혁 작업을 벌여야 할 시기에 명목 ‘경제성장율’과 건설사를 위한 ‘거품부양’을 위한 정책으로 가계부실을 심화시켜 금리인상을 할 수 없는 등 금융정책의 효과를 스스로 축소시킴

#### 4. 물가상승기,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

##### 1) 고환율-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

- 고환율-저금리 정책기조를 변화시켜 대외적 물가 상승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
- 원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이 구조화된 세계경제 환경, 차이나플레이션(Chinaflation)이라고 불리는 중국발 물가상승 등 대외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환율-저금리 정책은 더 이상 유지 가능한 정책이 아님
- 또한 4대강 개발로 인한 채소경작지 감소, 구제역 파동의 여파 등으로 말미암아 농축산물의 물가상승이 장기화될 수 있는 대내요인이 있음
- 이명박 정부의 수출확대정책, DTI 규제 완화 등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‘거품부양 정책’의 지속은 전면적으로 폐기되어야 함

##### 2)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

- 일회적 가격통제가 아닌 국내 독과점 정유업, 통신업, 금융업에 대한 독점이윤 통제 및 공정거래 정책 강화



- 현 정부의 생필품 및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가격통제 대책은 실질적인 물가안정은 고사하고 서민의 경제적 고통을 전혀 경감시키지 못하며, 오히려 경제위기를 서민경제로 전가하는 것을 은폐하고 있음.
- 관치경제식 가격통제를 넘어 정유업계는 물론 통신업, 금융업 등 국내 독과점 대기업의 독점이윤을 통제하거나 공정거래법 차원 등 구조적 차원의 정책으로 전환

### 3) 노동자·서민·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

-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철폐, 최저임금 정책 등을 통해 노동자 고용과 소득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펼쳐 서민의 물가인상의 충격을 완화해야 함
-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 서민의 소득향상 정책 추진
- 최저임금제 개혁을 통해 현행 시급 4,110원(2010년)의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%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300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을 보호
-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간 고환율 정책으로 커다란 이익을 본 수출대기업에게 고용안정 기금 조성 등 사회적 책임을 부여

### 4) 서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

-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는 정책 재량권 행사와 국민경제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, 정부,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개선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함
- 서민주택금융의 대대적인 확충 및 88%에 달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 저금리 모기지로 전환하는 등 구조개선 프로그램
- 중대형 아파트만 공급하여 시장실패한 시장 중심 주택공급정책을 중소형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

## 5)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

-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사를 위한 4대강과 같은 토목개발사업에서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교육과 복지인프라 구축, 탈석유 체제를 위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함
  -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이 융합되고 통섭되는 새로운 시대에 공교육과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
  - 재생가능에너지분야의 R&D와 인력에 투자를 통해 석유의존 경제를 탈바꿈하고 세계 에너지시장의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 추진